

## 국제법<선택>

### 2012년 시행 5급[행정] 공채 제2차시험

응시번호 :

성명 :

제 1 문. 출생지주의에 근거하여 A국 국적자인 甲은 2000년도에 B국으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다. 2007년 1월 B국과 A국 간의 전쟁이 발발할 상황에 이르자, C국으로 잠시 피신하였다. 피신 후 실제 전쟁이 발발하자 甲은 자신이 A국 국적을 갖고 있다는 점이 향후 B국에서 사업을 계속하는데 불리할 것으로 판단하여 2007년 12월 C국에 귀화하였다. 2008년 3월 전쟁이 끝나자, C국에 거주하고 있던 甲은 자신이 사업을 하던 B국으로 C국 여권을 가지고 입국하였고, 甲은 B국의 외국인 등록부에 C국 국민으로 등록하였다. 그런데 B국에 입국한 후 사업을 수행하던 甲의 사업이 주로 A국 정부를 지원하는 성격인 것을 알게 된 B국 정부는 甲을 과거 B국과 적대 관계에 있던 A국 국민이라고 판단하여 일시 구금하였다가 C국으로 강제추방하였다. 甲을 강제추방한 후 B국은 B국에 소재하는 甲의 모든 재산을 아무런 보상없이 국유화하였다. 자신의 재산을 국유화당한 甲은 본인이 직접 B국에 입국할 수 없어서 B국의 변호사를 자신의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국유화조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종국적으로 패소하였다. C국은 자국에 머물고 있던 甲을 통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C국은 B국의 甲에 대한 일련의 조치는 국제법 위반이라 주장하였다.

위의 사실을 전제로 C국이 주장하는 B국의 국유화 조치에 대하여 국제법에 입각하여 검토하고, 만약 그것이 국제법 위반이라면 그에 대하여 국제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20점)

제 2 문. A국과 B국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당사국이다. A국 주재 B국 대사관과 관련된 다음 사건에 대하여 답하시오. (총 15점)

- 1) B국 대사관은 대사관저로 사용하기 위하여 A국 국민 甲소유의 집을 5년간 월 임대료 5,000 USD로 임대하였다. 그런데 B국 대사관은 주택 임대 후 1년이 지나 임대료 지급을 3개월간 연체하였다. 이에 甲은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계약조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계약 해지 후에도 B국 대사관은 주택을 명도하지 않아 甲은 주택의 명도를 요구하는 주택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甲의 주택명도청구소송은 허용되는가? (5점)
- 2) A국이 도심의 교통혼잡에 대한 조치로 왕복 4차선인 도심의 도로를 양쪽으로 2차선씩 확장하여 왕복 8차선으로 확장하기로 하였다. 이 계획에 의하면 많은 A국 국민과 외국인 소유의 토지를 수용해야 함은 물론이고 B국 소유의 B국 외교공관 부지 500 m<sup>2</sup>중 200 m<sup>2</sup>도 수용해야 한다. A국은 B국 소유의 B국 외교공관 부지를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강제수용할 수 있는가? (5점)
- 3) B국 대사관에 민주화운동을 하던 반정부인사 乙이 피신하였다. 乙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A국 사법경찰관이 乙의 인도를 B국 대사관에 요청하였다. 이에 B국 대사관은 乙의 인도를 거부하면서 乙을 제3국인 C국으로 망명시키고자 하니 乙이 대사관 밖으로 나가더라도 체포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라고 요구하였다. B국 대사관의 이러한 행위는 적법한가? (5점)

제 3 문. 2002년 10월 5일, A국 내 모 지역에 체류 중이던 B국 국적의 사람들 수백 명이 외국인에 대한 고용 차별에 반발하여 집단 시위를 하던 중, 신원 미상의 청년들에 의하여 구타와 폭행을 당하여 2명이 숨지고 수십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은 즉각 출동하지 않았으며, 상황이 종료될 무렵에 현장에 도착하여 교통정리를 한 것이 전부였다. 후일 확인된 바에 의하면, 이들 청년들 중 일부는 이들 외국인에게 악감정을 갖고 있던 시민들이었으며, 또 다른 일부는 관할 경찰당국으로부터 수당을 받고 시위 진압을 목적으로 투입된 자들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A국은, 시민들과 관련하여서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안전 조치를 모두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질서를 유지할 수 없었다고 하였고, 이어서 시위 진압을 목적으로 투입된 자들과 관련하여서는 그들에게 물리적 수단은 사용하지 말도록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시를 위반하여 행동하였으므로, 이들 모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질 수 없다는 공식입장을 발표하였다.

위의 사실 관계를 전제로 국가책임법상 시민들과 경찰당국의 지시로 투입된 자들의 행위가 A국에게 귀속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시오. (15점)

## 행정안전부 시험출제과장